

탐욕의 경제에서 희망의 경제로

-이 영 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2강 성장과 분배 문제

1. 경제성장의 재평가

1.1 경제성장의 의미

★ GDP의 정의와 응용

-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에서 일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계”를 말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Y = C + I + G + (X - M)$$

(여기서 $Y = \text{GDP}$, $C = \text{소비지출}$, $I = \text{투자지출}$, $G = \text{정부지출}$, $X = \text{수출}$, $M = \text{수입}$)

※ 국민소득 3면등가의 법칙: 생산·분배·지출의 세가지 측면에서 GDP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론상 이들의 추정치는 동일해야 한다.

- GDP는 경제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서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고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 자료에 해당한다.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로 파악되며 명목GDP는 일인당 GDP 산출의 근거가 된다.

* 실질GDP =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해 최종생산물의 가치에 입각해 추정한 것으로서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 명목GDP = 해당연도의 가격을 적용해 추정한 GDP로서 가격변동이 반영된다.

※ $\text{GDP deflator} = \left[\frac{\text{명목GDP}}{\text{실질GDP}} \times 100 \right]$ 으로 측정되는데 전반적인 물가수준 변동을 나타낸다.

- 현재 GDP는 전 세계적으로 개별 국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기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장 = 복지 증대 = 행복 증가”라는 등식이 묵시적으로 전제가 되어왔다.

★ GDP의 한계

-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측정한 것이므로 단지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 따라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은 GDP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나아가 실제로 국민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다양한 활동(군비지출 확대 등)이 오히려 GDP를 증가시키며 GDP는 증가하는 반면에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GDP를 통해 얻는 정보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정보로 귀결된다. 이성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 따라서 전년 대비 GDP가 증가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참고사항: GDP의 한계에 대하여〉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일단의 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GDP는 틀렸다』(2012)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통계 자료로서 GDP의 한계를 보여준다: "현재의 가격체계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전혀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사실 왜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준적인 국민소득계정에서도 이런 비용을 감안한 항목은 없다. 만약 환경 비용을 반영해서 경제실적을 측정한다면 그 결과는 현재의 방식으로 계산된 수치와 사뭇 다를 것이다." (51쪽)

1.2 GDP의 대안 모색

★ 경제성장은 항상 바람직한가?

① 경제성장의 명암

- 지금까지의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에 의하면 경제성장은 국민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며 가능하다면 고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예) 선성장-후분배

→ GDP는 과거의 GNP를 대신해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 그러나 GDP는 불평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며, 국민의 복지에 반하는 활동이 오히려 GDP의 증가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었다.

→ 경제성장과 국민복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마저 관찰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다.

-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GDP의 유용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 대표적인 연구로는 2008년 2월 당시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및 장 폴 피투시(Jean-Paul Fitoussi)가 중심이 되어 2009년 9월에 완성한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세 사람의 공저 『GDP는 틀렸다(Measuring our lives)』로 출간되었다.

〈참고 사항: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사례〉

프리츠 카프라(Fritjof Capra)는 「스티글리츠 보고서」보다 훨씬 전에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2006)에서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물리학자로서 당시 이런 지적을 했다는 사실은 주목 받을 만하다.

- "자본주의거나 공산주의거나 간에 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무한정한 확장은 오직 재난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제는 명확히 증명되었는데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모든 경제학자들은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신앙은 양(陽)적 가치-확장, 자기주장, 경쟁-의 지나친 강조의 결과이며, 절대적 무한 공간 및 절대적 시간이라는 뉴턴적 기본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269쪽)

-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사상은 무분별한 성장이라는 기본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장은 파괴적이고 불건강하며 또한 병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성장은 개인 부문의 과도한 소비와 생산으로부터 교통, 교육 및 보건과 같은 공공부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변화는 물질적 획득으로부터 내적 성장과 개발이라는 근본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271쪽)

- "경제적, 기술적 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무분별한 성장의 세 번째 측면은 제도의 성장, 즉 회사나 기업으로부터 대학, 교회, 도시, 정부 및 국가에 이르는 제도의 성장이다.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원래의 목표를 넘어서 자기 보존과 확대를 추구하게 되므로, 제도 자체가 그 목적을 필연적으로 왜곡시킨다." (278 쪽)
- "사회적 불평등은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구조 자체 속에 박힌 것이며, 자본집약적 기술을 강조함으로써 영속화된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착취가 필요함을 <월 스트리트 저널>지의 '성장과 윤리' 라는 논설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이 논설은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성장과 더 많은 평등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83 쪽)

② 고(高)성장은 지속 가능한가?

- 지구의 부존자원 한계(각종 광물이나 수자원 및 기후변화 등)를 고려할 때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형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복리(複利)의 관점에서 볼 때 유한한 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예컨대 현재 중국과 같은 고성장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문명의 차원에서 경제성장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참고 사항: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문제>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생태계 파괴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를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 생태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생태계와 경제의 공진화(co-evolution)를 추구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생태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문제가 크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합의가 중요하다. 또한 생태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등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③ 성장의 대안은 무엇인가?

- 경제성장이 없으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이 정착하였으므로 고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 및 인구증가를 감소를 감안한다면 고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유경제의 확산이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이라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 자체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 이 문제는 공유경제 및 선물경제의 사례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의 가능성

① GNH의 등장 배경

- 아시아의 소국인 부탄 국왕은 1972년 부탄에는 GDP 대신 건강, 환경 등 다른 기본 요소들에 입각한 국민행복지수(GNH)가 사회 전반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GNH를 향상시키는 것을 국정 지표로 삼았다.

- 구체적으로는 ▲건강 ▲시간 활용 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올바른 정치 등 9개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GNH를 산출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2012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의 주요 내용

- 1) 소득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약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 2) 기초생활수준이 충족되면, 소득보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 예컨대 안정된 고용, 개인의 자유와 안전, 높은 수준의 신뢰, 견고한 공동체,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등이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친다.
- 3)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가치관 등이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며, 높은 소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덜 행복하게 된다.
- 4) 2015년 UN의 세계행복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행복지수 5.987로 세계에서 47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나타났다. 2013년의 41위보다 6단계 하락해 2013년 조사에서는 일본보다 앞섰으나 2015년 순위에서는 일본의 46위에 뒤졌다. 스위스는 행복지수 7.587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덴마크가 차지했으며 미국은 15위, 영국은 21위, 독일은 26위, 프랑스는 29를 차지했다.

〈참고 사항: 소득(돈)과 행복의 관계〉

- 1) 소득과 행복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도 증가한다. 그러나 많은 실험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한다.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면 소득, 즉 돈은 더 이상 개인의 행복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는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행복과 관련해 준거집단의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비교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림픽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는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만족스러워한다.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지만, 은메달리스트는 자신이 딸 수도 있었던 금메달리스트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이 통일된 1990년대 이후 생활수준이 크게 높아진 동독 사람들은 통일되기 전보다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낮아졌다. 이런 사례들은 준거집단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 3) 흔히 행복의 역설(happiness paradox)라 불리는 현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 수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나라(예컨대 인도)에 비해 부유한 나라(예컨대 미국)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야 하는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 이 점은 같은 나라를 두 개의 다른 시점에서 비교해도 성립한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가 한 나라의 국민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은 행복에 관해 최초로 객관적인 연구를 했던 리처드 이스털린(R. Easterlin)이 말하는 "행복의 역설" 또는 "이스털린 역설" 이다. 결국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4)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소득(건강, 여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행복의 주관적,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망라하면서 주관적인 측면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측정하는 기법을 고안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면 GDP를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풍요는 단지 행복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행복을 분석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는 영국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리처드 레이어드(Richard Layard)를 들 수 있으며 『행복의 함정(원제는 "Happiness")』(2011)은 행복에 관한 그의 대표 저서다. 다음과 같은 그의 지적은 특히 한국 사회에 적용된다:
 - "사회적 지위에 목매는 사회는 불행해질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대화의 주요 관심사는 누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의 책 216쪽)
 - "행복은 정부의 일이여야 한다.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행복은 문명화된 정부의 초기 목적이자 위대한 종착지다." 민주주의 정부란 개인의 노력이 집단의 노력보다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300쪽)

② GNH의 가능성

● GNH이 GDP를 대신할 가능성은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요인들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계량화하는가에 달려있다.

● 스티글리츠 보고서(『GDP는 틀렸다』)에 의하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요인들 중 상당수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량화된 지표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따른다.

<참고 사항: GDP의 대안 지표 모색>

1)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평균적인 지표들을 이용하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개발지수(HDI)이다. 이것은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복합지수로 각국의 기대수명과 교육수준, 일인당 GDP 등 모두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된다. 이 지표는 일인당GDP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의 국가순위를 나타낸다(『GDP는 틀렸다』, 156쪽).

참고로 UN은 1990년부터 매년 HDI를 발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정한 진보지표(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녹색 GDP, 행복 GDP,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s) 등 다양한 지표들이 GDP에 대한 보조 지표로 제시되었다. 이런 다양한 지표(지수)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앞의 책을 참조하라.

2)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GDP 기준에 의하면, 2014년 세계 28위(1위는 룩셈부르크, 일본은 24위)이고, HDI 기준에 의하면 15위(1위는 노르웨이, 일본은 17위)이다. 그리고 UN의 행복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47위(1위는 스위스, 일본은 46위)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지표에 의하면 한국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수준은 과연 그러한가? 아니면 우리의 인식이 편향되어 있는가?

2. 평등과 효율성: 상충적인가 보완적인가?

2.1 (불)평등 논의의 핵심 쟁점

★ 빅 트레이드오프(Big Tradeoff)는 사실인가?

● 평등과 효율성 간의 상충관계(tradeoff between equality and efficiency)는 1975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의 저서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1975)에 의해 주목 받기 시작했다.

● 오쿤 주장의 핵심은 평등(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대가(효율성의 감소)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지나치게 평등 지향적인 정책을 채택하면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하락하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며, 그 결과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후 오랫동안 학계와 정부에서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 이런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대체로 경제적 인센티브에 있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빈번한 도덕적 해이를 감안할 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실현할 수 없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진다.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고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고용 증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논리는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이 최근의 보편적인 견해다.

●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상충관계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불평등의 악화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 불평등과 효율성 간의 (상충)관계: 불평등 감소 → 효율성 증가 가능성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불평등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이 감소하면 오히려 효율성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지대추구행위(각종 로비활동)의 만연 → 불평등의 심화 → 효율성의 훼손
- 2) 빈곤으로 인한 인적 자본에 대한 과소투자과 부실한 공교육 기회균등의 실패 → 생산성 하락 및 효율성 훼손
- 3) 사회적 보험(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의 취약성 → 위험을 감수할 의욕 감소 → 경제의 역동성 하락 및 이로 인한 효율성 훼손
- 4) 단기적인 금전적 성과 유인 보수의 만연 → 장기 성장을 훼손시키거나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 →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효율성 훼손
- 5) 효율임금(efficiency wage) →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 →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예: 헨리 포드(Henry Ford)의 효율임금)
- 6) 누진적 조세제도의 비용 과대평가/편익 과소평가 → 미국의 경우 이런 편향된 인식으로 인해 누진적 조세제도를 완화했음 →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하락 → 효율성의 훼손

요약하면, 스티글리츠는 일정 수준을 넘는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정치·경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경제 전반에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성장의 동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앤서니 앳킨슨도 (Anthony B. Atkinson)도 『불평등을 넘어』(2015)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불평등의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깊이 연구를 해온 경제학자로서 이 책에서 불평등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을 상세히 논하는 동시에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불평등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의 저서에서 토마 피케티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그도 불평등과 효율성 간의 관계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효율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실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상세한 내용은 그의 저서 9장을 참조하라

〈참고 사항: 불평등과 2008년 금융위기의 관련성〉

미국에서 불평등의 악화가 금융 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단기간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처방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평등이 악화되면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설명한 대표적인 저술로는 현재 인도 중앙은행 총재이며 과거 IMF 수석이코노미스트였던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의 『폴트라인』(2011)을 들 수 있다.

★ 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① 불평등의 정의 문제

- 불평등은 크게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모든 초점은 기회의 불평등을 낮추는데 맞춰져 왔다.
- 기회의 평등만 보장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강하다.

② 불평등의 다양성: 좋은 불평등과 나쁜 불평등

• 불평등 중에는 좋은 불평등(창의적 노력을 통한 부의 축적과 관련)과 나쁜 불평등(지대추구를 통한 부의 축적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모두 매도할 수는 없다.

•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bearable inequality)과 용인할 수 없는 불평등(unbearable inequality)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용인할 수 없는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면 결국 사회적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경우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자본주의와 불평등/빈곤의 문제

•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포함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류 역사상 어떤 경제체제도 자본주의만큼 보편적인 빈곤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본다.

※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신자유주의의 대부 격인 시카고대학의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1962)에 그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

• 빈곤의 극복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별개의 사안이다.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K. Marx)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역사적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 점이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수행한 연구의 독보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 그는 『21세기 자본』(2014)에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며, 실증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검증하려 했다. 즉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참고 사항: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재된 모순과 관련된 논의〉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 (2014)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재된 근본 모순을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업들간의 무한경쟁과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한계비용이 점점 제로 수준으로 근접해 갈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기업의 이윤의 원천이 고갈되어 이런 산업은 붕괴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피케티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를 지적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은 상호 모순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내재된 불안정 요인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 피케티 논의의 핵심: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에 고유한 속성

① 주요 용어

* **국민소득** = 국내총생산(GDP) - 자본소모(감가상각) + 해외순소득
= 자본소득 + 노동소득

* **자본**: 시장에서 교환이 가능한 비인적 자산의 총계로서 모든 종류의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사용하는 사업자본(공장, 사회기반시설, 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한 마디로 사회 전체의

순자산의 총계를 말하며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 자본과 다르다.

→ **국부** = 민간부문의 부 + 정부부문의 부(= 국민총자본)
= 국내자본 + 순해외자본

* β = 자본/소득 비율

② 자본주의 제1, 제2 기본법칙

● 제1 기본법칙: $\alpha = r \times \beta$

* r 은 자본수익률이고 α 는 자본소득분배율로서 “자본/소득 비율 · 자본수익률 · 자본소득분배율”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 분석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1 기본법칙이라고 부른다.

● 제2 기본법칙: $\beta(=\text{자본/소득 비율}) = s/g$

* 여기서 s 는 저축률, g 는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이 법칙은 Roy Harrod(1939)와 Evsey Domar(1946)의 성장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 이 법칙은 피케티가 말하는 소득분배와 자본축적의 동학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다. 즉, 저축을 많이 하고(높은 s), 느리게 성장하는(낮은 g) 국가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β 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g 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이라는 것이 피케티 논리의 핵심이다.

● 두 기본법칙으로부터 유도되는 법칙: $\alpha = r \times \beta = r \times s/g$

이 법칙은 자본수익률(r)과 성장률(g)의 미세한 차이가 장기적으로 사회 불평등 구조와 동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r 은 거의 항상 g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본소득 분배율(α)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준다.

<참고 사항: r 과 g 의 관계에 대한 논의>

1. 피케티의 계산에 의하면 1700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대략 300여년에 걸친 기간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 할지라도 연 평균 1.5%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자본수익률은 역사적으로 평균 4~5%를 유지했으므로 $r > g$ 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관계라는 사실이다.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한 자본의 우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케티의 주장이다.

2. $r > g$ 관계는 피케티 주장의 핵심이다. 그런데 r 은 글로벌 차원에서 모든 자본의 평균 수익률에 해당하므로 비록 $r > g$ 가 성립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r < g$ 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능성을 감안할 때 $r > g$ 에만 의존해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는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역으로 $r < g$ 인 경우에도 불평등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공회 외의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2014)를 참조하라.

③ β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세의 시사점

- 장기적으로 부(富)의 성격은 농경지 형태의 자본에서 산업 및 금융자본, 그리고 도시의 부동산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국민소득의 배수로 측정된 자본총량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예)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는 자본-소득 비율이 6~7배였던 반면, 미국에서는 4~5배였다. 현재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은 6배에 가까운 반면, 미국은 4배를 약간 넘는다.

-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21세기에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저성장 체제로의 회귀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인구 성장의 둔화는 자본으로의 귀환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 $\beta = s/g$ 법칙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오로지 장기적으로만 유효하다. 특히 이 법칙은 자산가격이 평균적으로 소비자물가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 β 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세습자본주의의 출현을 의미한다. 1970년대 초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민간 부의 총액은 국민소득의 2~3.5배에 달했는데, 40년이 지난 2010년에는 국민소득의 4~5배로 상승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 강력하게 회복되었다는 증거다.

④ 저축률(s)과 성장률(g)의 장기적 추세

- 1970년~2010년의 평균 저축률은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7~8%였던 반면,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14~15%였다.

→ 성장률과 저축률의 차이를 결합하면 나라에 따라 축적한 자본량이 다르고 1970년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부유한 국가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본/소득 비율은 "U"자형을 보여주었으며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 세계적으로 성장률은 현재 3%에서 21세기 후반에는 1.5%로 하락하는 반면, 저축률은 장기적으로 약 1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beta = s/g$ 법칙에 의하면 자본/소득 비율이 대략 7배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자본의 우위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자본-노동 소득분배의 역사적 패턴

-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몫인 α 의 일반적인 변화 추이는 β 와 같은 "U"자형 곡선(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 영국과 프랑스에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자본소득의 몫은 35~40%였는데, 20세기 중반에는 20~25%로 줄어들었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는 다시 25~30%로 증가했다

- 데이터에 의하면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순자본수익률은 연 4~5% 안팎을 보였으며 장기적으로 뚜렷한 상향 또는 하향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자본-노동 소득분배 패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⑥ 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

- 사회의 불평등은 노동소득의 불평등, 자본 소유와 자본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이 두 조건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따라서 모든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더해진 결과다.

〈참고 사항: 지니계수의 한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불평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수로서 자주 사용되지만, 불평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해지고 1에 가까워질수록 더 불평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지니계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0이었고, 뉴질랜드 0.317, 일본은 0.336으로 한국보다 불평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1년 0.311, 2012년 0.307로 불평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첫 번째 규칙적인 패턴은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이 항상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보다 크다는 것이다. 자본 소유와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 피케티는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1700년대 이후의 실증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그의 주요 업적에 해당한다. 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소득 상위 10%가 전체 노동소득의 25~30%를 차지하는 반면, 자본소득 상위 10%는 항상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한다. 그리고 노동소득의 하위 50%는 노동소득의 상당 몫을 갖는 반면, 부의 분포에서 하위 50%는 자본을 거의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소득분포의 상위 1%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이 점은 1800년대 프랑스의 경우든 2010년대 미국의 경우든 상위 1%는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질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 소득계층과 부의 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노동소득 분배의 상위 10% 또는 하위 50%는 부의 분배의 상위 10% 또는 하위 50%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다.

⑦ 부의 양극화 메커니즘: 자본수익률 vs. 경제성장률

-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모든 사회에서 부가 과도하게 집중된 원인은 자본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1820년에서 1913년까지 자본수익률은 평균 약 5%였고 성장률은 약 1%로서 현저한 격차가 있었다. 그래서 자본소득이 국민소득의 약 40%를 차지했다.

-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은 이유

* 이 문제는 논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오랜 기간 $r > g$ 였던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 고대에서 17세기까지 연간 성장률은 오랫동안 0.1~0.2%를 넘지 않았던 반면, 자본수익률은 연 4~5%를 유지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토지수익률에 해당하는 크기였다.

* 일반적으로 4~5%인 순수한 자본수익률은 역사를 통틀어 글로벌 성장률보다 뚜렷이 높았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연간 3.5~4%의 성장률을 실현해 이 둘의 격차는 크게 줄었다. 그렇지만 21세기에는 인구성장이 둔화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 결론적으로 시간선호(time preference)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r > g$ 의 관계는 장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

* $(r - g)$ 가 부의 불평등의 균형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r = 5\%$, $g = 1\%$ 였던 19세기 프랑스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 부의 축적에 관한 동학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상위 10%의 몫이 전체 부의 약 90%, 최상위 1%의 몫이 약 50%에 달할 정도로 부의 극단적인 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⑧ 글로벌 자본세

● 글로벌 자본세에 대한 피케티의 입장은 다음 표현에 잘 요약되어 있으며, 그 경제적 의의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현 세기의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를 다시 통제하려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수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 글로벌 자본세가 될 것이다.”(617쪽).

● 그러나 글로벌 자본세는 유토피아적 이상이다. 그렇지만 보호주의와 자본통제는 글로벌 자본세의 만족스러운 대안이 아니다.

● 글로벌 자본세는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그리고 국내에서 그 이득을 공정하게 분배하면서 경제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글로벌 자본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 투명성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 글로벌 자본세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과세를 통해 부의 분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누진적 소득세, 누진적 상속세와 더불어 누진적 자본세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각각은 이상적인 조세체계에서 필수적이다.

● 여기서 제안하는 자본세는 영구적인 것이므로 세율은 상당히 낮아야 한다.

● 자본에 대한 과세는 공공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다. 재정긴축이나 인플레이션은 결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 자본세는 $r > g$ 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다. 이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적절한 선에서 통제할 수 있다.

※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앞선 나라들의 성장률이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1~1.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이다.

2.2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전망

★ 불평등의 전개 과정에 대한 개관

-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 과정에서 단 한번도 불평등의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다.
- ※ 1945년 해방 이후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성장, 분배 및 복지라는 개념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종속적인 경제였으며 형식적으로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
-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선성장, 후분배」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참고 사항: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 전개 과정의 특징>

- 1) 이 기간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군사정부는 고도성장을 통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고용확대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단순한 전략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착시켰다.
- 2) 강남개발을 필두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부동산 개발정책은 부의 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개인적으로 강남개발을 대형아파트 분양 위주가 아니라 소형아파트 임대 위주로 개발했다면 부동산 투기와 부의 불평등 분배를 완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개발 관련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렸던 권력층 및 주변 인물들의 탐욕으로 인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외환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의 자본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려와는 달리 재벌총수 및 일가는 자본시장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현실을 대변한다.

★ 불평등의 현황과 전망

-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조문(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조세나 이천지출을 통한 빈곤 완화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한다. 조세체계의 낮은 누진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운운하면서 법인세를 완화하고 중부세를 낮추는 등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이 드러났다.

<참고 사항: 정부 실패의 사례>

1) MB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이라 할 수 있는 자원외교의 실패, 4대강 개발의 허실, 부실 인사 등에 대해서는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펴낸 『MB의 비용』(2015)을 참조하라.
2) 낮은 산업용 전기료, 높은 환율 정책, 낮은 법인세율 등은 대표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으로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정권창출의 이념으로 삼아 집권했으나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예를 들어 국회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동반성장"도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

● 한국에서 최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는 33%였지만 2012년에는 45%로 증가했다. 이것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 사항: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평가>

1)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관해서는 피케티의 방식을 이용해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심층 연구가 대표적이다.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의 연구도 거의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공식적인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지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본의 불평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거의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2)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평균이 약 2억 6,000만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한편 상위 1퍼센트의 가계의 순자산은 38억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이것도 상위 계층 가계의 순자산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류이근 기획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2014) 참조). 이 부분에 관한 더 많은 자료 축적과 분석이 필요하다.
3) 피케티도 지적했듯이 금융규제완화는 소수의 금융 자산가들에게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점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강조한 바 있다.

●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불평등의 악화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불평등은 경제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리 덴트(Harry Dent)가 지적했듯이 한국사회도 조만간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과 심각한 고령사회에 직면할 것이므로 총수요부족으로 인한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배적인 한 내수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절벽이 발생하고 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수출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공히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런 총수요의 감소는 곧 고용 감소, 투자 위축 및 성장을 하락을 의미한다(이런 입장을 소득주도 성장론이라 한다).

<참고 사항: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임금을 기반으로 한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u>연도</u>	<u>2004</u>	<u>2005</u>	<u>2006</u>	<u>2007</u>	<u>2008</u>	<u>2009</u>	<u>2010</u>	<u>2011</u>	<u>2012</u>	<u>2013</u>
분배율	59.1%	61.2	61.8	61.2	61.9	61.9	59.4	59.9	60.9	61.4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대략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소득분배율이 4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소득분배율이 대략 30% 정도인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편이다. <u>10%포인트 낮다는 것은 큰 차이를 의미한다.</u>										

-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과 적절한 복지 정책을 혼합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벌 위주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예를 들면 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공유경제의 확대)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문헌>

-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글항아리(2014)
- *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2013)
- *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GDP는 틀렸다**, 동녘(2012)
- * 앤서니 앳킨슨, **불평등을 넘어**, 글항아리(2015)
- * 김공회 외,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바다출판사(2014)
- * 류이근 외,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시대의 창(2014)
- * 스튜어트 랜슬리,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비즈니스북스(2012)
- * 리처드 레이어드, **행복의 함정**, 북하이프(2011)